

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진통... 임금·복지 격차 쟁점

포스코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제기 하청노조도 직고용 방식 반발 S직군 임금·복지 차이가 핵심 GGM·현대제철도 고용재편 몸살



포스코 사옥.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을 추진 중이지만 정규직과 하청 노조 양측의 반발에 직면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 안정 해법으로 제시된 직고용이 오히려 임금과 지위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충돌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돼 온 고용 구조 재편의 '진통'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6일 직고용 문제를 논의한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경영진 사과, 직무별 임금·조직 체계 반영, 복지 인프라 사전 투자, 기존 조합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 체계 등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하청 노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당사자와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포스코는 조업지원 협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S직군'을 신설해 특별채용을 진행 중이다. 임금은 동일 연차 E직군 대비 약 70% 수준이며, 복리후생은 직영 직

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별도 직군 신설과 임금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직고용 방식 자체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은 비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포스코 평균 급여 1억1600만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 7000명 직고용 시 연간 약 8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사 측은 "기존 도급비로 지급되던 비용이 노무비로 전환되는 구조여서 실제 추가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노조는 조정 신청이 파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하루 수백억원대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S&P가 지난 3월 포스코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춘 상황에서 노무 갈등이 비용 부담과 경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도 환경 속에서 직고용이 추진되면서 노동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과 직군 분리도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업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낮은 임금을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는 구조로 출범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생산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캐스퍼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교대 전환 등을 둘러

싼 이견으로 생산이 제한되면서 매출은 수년째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됐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직고용 시정지시 관련 재판이 병행 중이다. 지난 2021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약 4400명을 정규직화했지만 '원청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조 반발로 점거 농성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이 불법과건 혐의로 고소되는 등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한 직영화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 하중강 성공회대 노동이카데미 교수는 "서울메트로가 직영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노사 협의 구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 현장 문제를 공론화했던 것처럼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 '실거주 유예'... 무주택자에 연말까지 적용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대상 확대 12월31일까지 허가 신청해야 최대 2028년 5월까지 입주 유예 국토부 "갭투자 허용은 아냐"



김기택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세입자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하는 것.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 한정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면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5월 12일) 기

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실거주 유예에 따른 매물 출하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매물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

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만 볼 때에는 매물 폭증보다는 거리가 멀어 붙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양위원은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위원은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ESS 급성장에 K-배터리 승부수... LFP·고부가 전략 본격화

올해 글로벌 설치량 41% 증가 전망 LG엔솔·SK온, 북미 LFP 공략 속도 삼성SD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겨냥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올해 40%를 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사업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컨테이너형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상업화에 적극 나서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 포트폴리오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시장조사 기관 블룸버그뉴에너지 파이낸스(BNE

F)는 올해 글로벌 ESS 신규 설치 규모가 158GW(459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1% 증가한 수준이다. 2036년에는 연간 글로벌 ESS 설치량이 308GW까지 확대되고 같은 해 말 누적 용량은 2.9TW(10.5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ESS 시장 확대에 맞춰 공격적인 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3사 가운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중심으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화큐셀과 2028~2030년 5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테슬라 ESS용 LFP 배터리 공급도

추진되는 등 북미 대형 프로젝트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SDI는 단순 가격 경쟁보다 고부가 ESS 시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UPS용 고효율 배터리와 서버 내장형 BBU 배터리 솔루션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ESS 시장의 LFP 전환 흐름에 맞춰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며 데이터센터와 프리미엄 전력 인프라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통해 북미 시장 진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미국 플랫아이언에너지와 2026~2030년 최대 7.2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조지아 공장 일부 전기차 배터

리 라인을 전환해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가 맞닥뜨린 경쟁 환경은 녹록치 않다. LFP 배터리가 ESS 시장의 주류 기술로 자리 잡는 가운데 니켈·코발트·망간(NCM)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9년 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차용 NCM 배터리에 강점을 둔 국내 업체들로서는 ESS용 LFP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특히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진입도 변수다. CATL은 최근 중국 ESS 시스템 통합사 하이퍼스트롱과 60GWh 규모의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피크 에너지와 개발사 주피터 파워가 최대 4.75GWh 규모 계약을 맺은 사례도 거론된다.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단기간에 LFP를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원재료 조달과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ESS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과제는 ESS 성장세를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물량 확대, SK온은 ESS용 LFP 양산, 삼성SDI는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전력 솔루션을 각각 앞세우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원가 격차와 빠른 기술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